

한국 인구학의 또 다른 미래 과제: 인구학 지식의 실용성 추구*

이 성 용(강남대)

인구학은 사람들의 집단인 인구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인구의 크기, 지리적 분포, 구성, 이것들의 변동 그리고 그러한 변동들의 구성성분들을 분석하는 학문이다(Hauser and Duncan, 1959: 2). 사회인구학자는 인구 크기와 변동에서의 주된 요소인 출산, 사망,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발견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 연구들은 확실히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연구에서 중요한 정보 및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연구는 오늘날뿐 아니라 미래에도 한국 인구학의 주된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학의 문제로만 남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저출산의 시대가 없었고, 또 고령화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시대로 인도한다. 이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설계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인구학 연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한다. 이제 인구학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져서 인구학 영역으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인구학자는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설계에서 인구학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이 글은 미래 삶의 설계에서 인구학 지식이 왜 필수적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말할 것이다. 기존의 인구학 연구들은 주로 출산과 사망 그리고 인구 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들을 종속변수 혹은 설명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 혹은 원인변수로 활용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파생되는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째, 20세기 후반 이래 우리나라에서의 출산, 사망, 인구 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들의 급격한 변동이 우리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한다. 둘째, 대량생산과 획일성을 강조했던 박정희 대통령시대의 산업사회와 달리, 개인들의 다양한 개성들과 차이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인구학적 지식이

* 이 원고는 2006년 추계 인구학 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의 미완성 원고임을 밝힙니다. 보다 나은 원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들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²⁾. 급격한 사회변동은 집단내의 차이와 다양성을 낳기 쉽다. 이를테면,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사람, 또 그것의 일부는 수용하고 다른 것은 거부하는 사람 등 사회 내에서 다양한 개인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 지식들과 자료들이 지구촌 사회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 인구 변동과 삶의 방식 변화

1-1. 인구수의 증가

인구수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찍이 맬서스는 급격한 인구증가는 식량부족을 초래하기 쉽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그의 이론은 영국에서 신구민법을 생성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또 세계 대전 후 서구의 인구학자와 정치가들은 비서구국가의 급작스런 인구증가로 인한 지구의 자원고갈을 염려하여 비서구국가에서의 가족계획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등과 같은 나라는 경제성장이 인구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된 결과, 맬서스와 그 후계자가 주장했던 인구수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다. 인구수의 증가는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인구성장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어쨌든 인구수의 증가가 우리 삶의 방식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³⁾.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해방 바로 직전 약 1,656만에서 1949년 2,000만을 넘었다. 특히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매우 급증하여 1970년에는 3,000만을 1985년에는 4,000만을 돌파하여 2005년에는 약 4,728만 명을 보이고 있다. 약 60여년에 걸쳐 총인구수는 2.4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수의 급증은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급증된 인구들을 위해 식량생산을 상승시키거나 수입해야 하고, 또 이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확충시켜야 한다. 식량증산과 주택을 위한 토지 개발은 과거 땅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요컨대 인구수의 증가는 우리의 소비와 생산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게다가 이러한 인구 증가는 크기뿐 아니라 인구 구조까지 변화시켰다.

2) 일반화와 보편성을 중시하는 거시 경제학적 분석은 여전히 일반적인 추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집단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던 사회인구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이러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와 같은 거대한 집단에서의 인구 수 변동뿐 아니라 작은 집단에서의 인구 수 변동도 그 집단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학생의 인원수가 20명일 때와 80명일 때 선생님의 수업방식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1-2. 인구구조의 변동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인구크기 뿐 아니라 인구 구조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또 그 변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출산, 사망, 그리고 인구 이동의 변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계속 하강하고 있다. 합계출산력이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 1974년 3.4명, 1980년 2.8명, 1983년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그 후 우리나라 출산율을 계속 하강하여 2001년에 초저출산 수준인 1.3에 도달하였고, 2005년에는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인다.

출산율 하강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를테면 과거 5-6명의 형제자매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은 1-2명의 형제자매 속에서 자라난 오늘날의 젊은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가족 사회화를 경험할 것이다. 형제자매가 많으면 성장과정에서 서로 양보와 희생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 반면, 1-2명이 자녀는 그러한 것을 배우는 환경이 미약하다. 자녀의 수가 적은 가족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함께 고려하면,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물질적 풍요로움과 개인주의를 보다 강조하고, 그러한 방식의 삶을 향유하고자 할 것이다.

사망률도 급격히 하강하였다. 영아사망률을 볼 때, 해방 후에는 무려 1000명당 150여명 이 첫돌 이전에 사망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3명꼴로 세계에서 가장 최저수준이다. 낮은 영아사망률은 부모에게 아기의 죽음이란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고, 또 아이의 생존을 축하하는 행사들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오늘날 첫돌과 백일은 여전히 크게 행사하지만 삼칠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출생시 기대수명도 1971년 남자 59세, 여자 66세에서 2005년 현재 남자는 75세, 여자는 82세로 연장되었다. 지난 34년 동안에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약 16세가 증가되었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혼인 기대수명과 노동 기대수명의 연장을 의미한다. 비록 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지고 핵가족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대수명의 연장은 부부가 함께 혼인을 계속할 기간을 연장시킨다.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 2000년도 30세 기준 유배우 기대년수는 남자는 37.3년, 여자는 32.2년으로 1970년에 비해 남자(34.6년)는 4.0년이 여자(29.9년)는 5.1년이 증가되었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중시되는 오늘날의 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명 연장은 일해야 하는 기간의 연장, 즉 노동기대수명의 연장을 의미한다. 기대수명이 증가될수록 일해야 하는 기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노동 기대수명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수명⁴⁾보다 길다(호이스, 1998). 따라서 기대수명의 연장

4) 얼마 전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가 직장인 1142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체감 기업 기업수명은 불과 6.3년에 불과했다. 가장 수명이 길 것으로 예측된 대기업은 17.4년, 외국

즉 노동수명의 연장은 평생직장보다 평생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볼 때 개인이 평생 일하는 기간이 그가 속한 회사나 기관의 수명보다 더 길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병리학 변천과 관련된다. 오늘날 주된 사망원인은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의 입원과 도움을 요청되므로, 전염병과 같은 급성 사망원인보다 병원에서 사망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2005년 사망장소별 사망자 구성비를 보면, 의료기관내 사망자가 49.8%, 주택내 사망자가 35.2%, 기타 장소(도로, 산업장, 시설기관, D.O.A 등) 사망자가 15.0%이다. 1995년에는 주택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66.0%로 10년 사이에 30.8%가 감소했고 의료기관 내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불과 22.8%였는데 10년 사이에 20.0%가 증가하였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망자의 수의 증가는 장례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고, 병원들이 장례식장에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장례식장은 병원이 아니라 노인들의 자택이었다. 노인이 객지 이를테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조차 시신을 집으로 모셔와 장례를 지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보다는 병원 등의 장례식장에서 장사를 지낸다. 이러한 추세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되면 될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방인들과의 거주는 이전의 생활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구성한다. 이를테면 다른 출신 지역의 사람들과 상호교류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음식을 먹게 된다. 이것은 서울에서 전라도 음식점이 번성하게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 비율은 1960년 28.0%에서, 1975년 41%, 1990년 74.4%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는 1995년 78.5%, 2000년 79.7%, 2005년 81.5%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45.3%(2019만), 2000년 46.3%(2135만), 2005년 48.2%(2277만)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 인구는 아파트 값이 급등한 2000년 이후에 약141만이 증가하였는데, 2000-2005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은 전국의 2.5%에 비해 수도권 6.6%, 특히 경기도는 15.9%로 매우 높은 증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인구 수는 2000년 38.6만명에서 2005년 69만명으로 증가하여 무려 78.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서울 인구수는 1995년 1023만명에서 2000년 9,89만명, 2005년 98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이후 서울 인구의 상당 수가 수도권으로

기업은 12.7년, 벤처 코스닥 기업직업은 3.1년에 지나지 않았다(메트로, 2006년 12월 14일). 그러나 2002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동기대 여명 생명표에 의하면, 2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34.5년, 여자는 23.1년의 노동기대여명을 가진다.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은 총 인구에서 농민의 비율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1949년에는 농민의 비율이 74.5%로 상당히 높았지만, 그 후 1960년 58.2%, 1970년 44.7%, 1980년 28.4%, 1990년 15.5%, 2000년 8.6% 그리고 2005년에는 7.1%로 55년 만에 그 비율이 1/10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농민의 수도 1970년까지는 1400만 명대를 유지하였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1980년 1,082만, 1990년 661만 명, 2000년 403만 명, 그리고 2005년에 341만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농촌은 현재 해외신부의 비율이 급증되고 있고 또 고령화도 가속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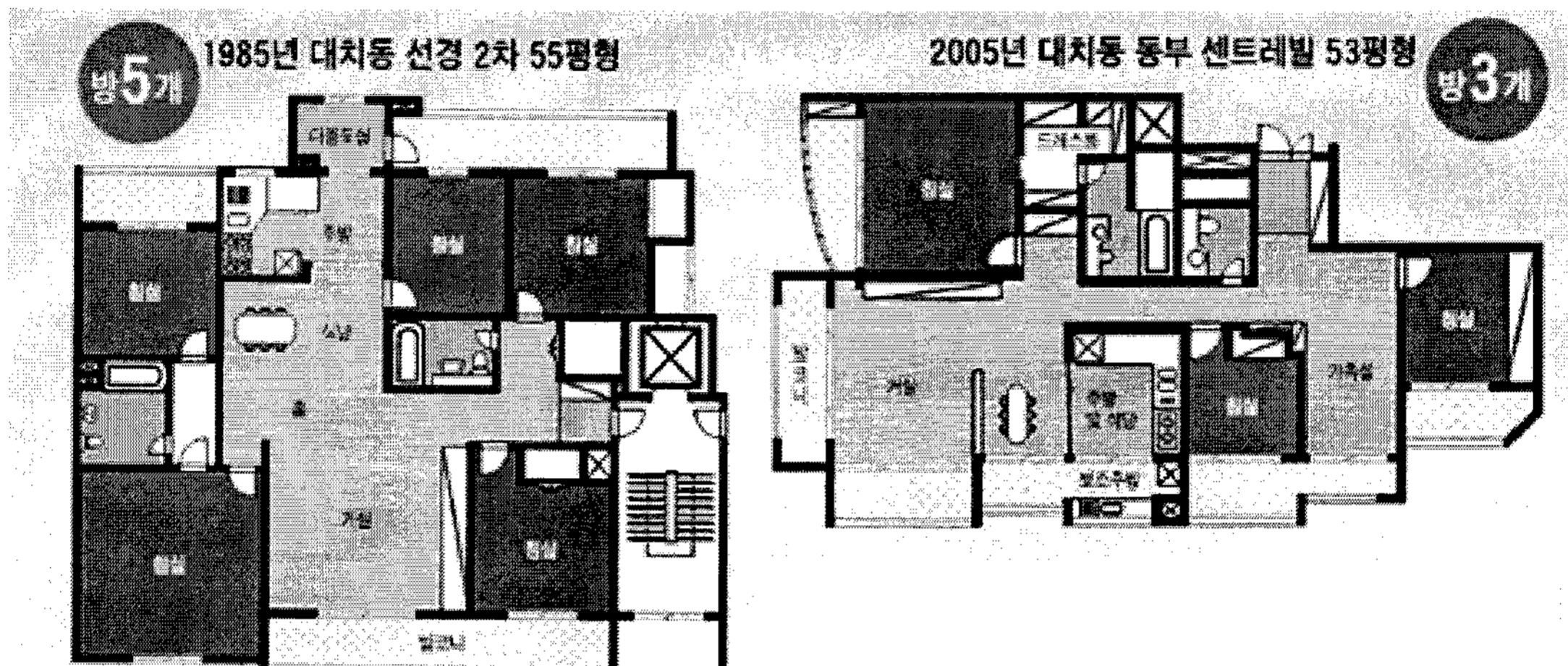
산업화와 도시화는 경지면적도 변화시켰다. 경지면적은 1969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231만ha에 이르렀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택 및 공업용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2005년에는 182만4천ha로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급격한 감소는 농가호당 경지면적을 증가시켰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949년 83a의 1.7배인 143.3a로써 경작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도시화는 농촌뿐 아니라 어촌 사회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어민 가구의 수는 1948년 17만 1천호에서 2004년 7만2,500호로 감소하여 무려 57.6%가 감소하였다. 어민의 수 역시 1948년 52만1천명에서 2004년 20만 9,000명으로 59.7%가 감소하였다. 반면 어업생산량은 1960년 47만M/T에서 2004년에는 251만9천M/T로 5.4배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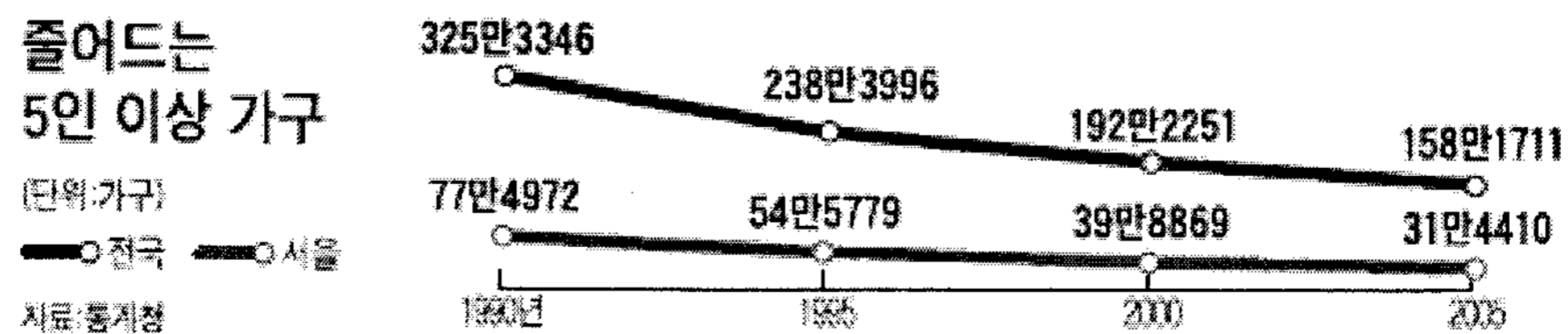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야기하였다. 주택보급률은 1965년 81.3%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아파트 건축이 크게 늘면서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주택보급률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이전까지는 단독주택 건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설이 주를 이루면서 2004년 현재 주택건설의 87.3%를 아파트가 차지한다.

아파트 건설 설계는 가구원 수의 변동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55년 5.5명, 1960년 5.6명 1970년 5.2명으로 1970년대까지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 4.54명, 1990년 3.71명, 1995년 3.34명, 2000년 3.12명, 2005년 2.88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 가구 수는 1955년 약 391만에서 1960년 436만, 1970년 557만, 1980년 797만, 1985년 957만, 1990년 136만, 1995년 1296만, 2000년 1431만, 2005년 1589만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년 만에 약 4배가 되었다. 가구 수의 증가는 그만큼 많은 주택의 수요를 요구하는 반면,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는 이전의 아파트보다 작은 수의 방을 요구한다. 그 결과 건설회사는 1970년대와 다른 방식으로 아파트를 설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같은 평수의 경우 줄인 방의 평수를 다른 방에 붙이거나 거실이나 부엌의 평수를 늘이는데 활용해야 한다. 최근 분양된 대형 아파트들은 방이 대개 4개 이하이며,

심지어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00평과 103평 아파트는 침실로 쓸 수 있는 방이 3개밖에 안 된다. 이는 가구원의 수 변화와 핵가족 제도화가 몰고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아파트 공급은 대가족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구하는데 애로 사항을 준다. 전체 가구 중 5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약 49.9%, 1985년 39.0%, 1990년 28.6%, 1995년 18.4%, 2000년 13.4%로 감소하였고, 5인 이상 가구의 수도 1980년 약 398만, 1985년 373만, 1990년 325만, 1995년 28만, 2000년 192만, 2005년 188만으로 감소하였다. 아직도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건설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은 방의 수를 가진 아파트들만 제공한다는 것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시장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구원 수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에 아파트 설계와 공급방식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4.8%, 1985년 6.9%, 1990년 9.0%, 1995년 12.7%, 2000년 15.5%, 2005년 20.0%로 증가하였고, 1인 가구의 수는 1980년 38만, 1985년 66만, 1990

년 102만, 1995년 164만, 2000년 222만, 2005년 317만으로 증가하여 25년 만에 무려 8.3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자만의 물품, 이를테면 일회용 상품의 생산을 증가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일인 가구의 상당부분은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미혼 세대가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세대이다. 따라서 인구학자들은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앞으로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삶의 방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5인 이상의 가구들이 존재하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구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들과 살기 편한 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고 또 증가할 수도 있다. 이제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인구학 추세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추세 속에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인구학적 특성들 차이와 다양성

인구구조의 거시적 변동이 우리의 일상생활 혹은 소비자의 욕구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미칠 수 있다. 거시 경제학 분석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차이와 다양성을 간과하곤 한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제일 먼저 진입하기 시작할 베이비붐 세대들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달로 인해 이전 세대와 다른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성장하였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 붐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노후 삶을 설계하기 쉽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생, 현재 43~51세)가 가장 주택수요가 왕성한 시기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도달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한국일보 2006년 10월 26일). 즉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소유주가 가장 많은 40대와 50대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 특히 대형 주택의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이다(행정자치부가 2004년 말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나라 건물 소유주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40~49세(33.9%), 50~59세(24.0%)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2001년부터의 주택가격 급등도 이런 인구구조에 크게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40대에 접어들면서 2000년 20.2%(929만8,000명)이던 40~54세 인구 비중은 2005년 23.2%(1,087만9,000명)로 급증했다. 5년 여 동안 이 연령대

인구가 158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되었고 그 결과 아파트 값이 급증되었다⁵⁾.

이러한 전망은 어쩌면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와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와의 동질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미국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다양성을 무시한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가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축적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반기 베이비붐 세대 중 특히 475세대는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아 경제력을 많이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4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경제능력이 꾸준히 향상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가장 구조대상이 된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다. 더불어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끊는 미국과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들은 엄청난 자녀의 사교육비로 재산의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며,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심지어 결혼자금까지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어쩌면 이들 분석과는 반대로 있는 집을 팔아야 할 실정에 놓여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베이비붐세대의 정확한 인구학적 특성의 분석을 통해 그러한 경제학적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2.1.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성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붐 세대는 1955-63년(또는 1957-63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대 전반까지 폭 넓게 정의하기도 한다. 비록 1964년부터 67년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는 약간 감소했지만 1970년 초반까지는 많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2005년 센서스에 의하면, 1955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34.5%를 차지하고 있다. 1955-1959년에 태어난 인구는 390.1만(8.3%), 1960-64년 412.3만(8.8%), 1965-69년 411.3만(8.7%), 1970-1974년 409.6만(8.7%)으로 총수는 1,623만에 달한다.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라 일컬어지는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 30대 중반에서 50세에까지 걸쳐 있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는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화 과정 대신 다양하면서 차이가 나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475세대와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386세대들은 경제성장 발달과정과 교육 입시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선호할 수 있다.

5) 부동산컨설팅업체 저스트알 명재광 이사는 "1980년대 말 집값 급등기와 달리 이 기간 서울 강남 등지의 중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은 40~54세 인구가 급증했고, 이들의 주택 수요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교체 수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볼 때, 386세대는 475세대에 비해 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선호할 것이다. 또 보다 성장된 경제적 환경 하에서 성장한 375세대는 475세대보다 소비지향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형태의 소비자들이 되기 쉽다. 따라서 기업이 인구 구조의 변동과 결부하여 판매 전략을 수립할 때, 그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세대일지라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삶의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이를테면 475 세대들은 그들이 어릴 적 성장한 지역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를 통해 진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지역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역과 고등학교에서 사회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1960년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달로 베이비붐 세대라 할지라도 태어난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되었고, 또 동일한 코호트의 베이비붐 세대라 할지라도 성장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들은 동일하지 않는 매우 다양한 특성들을 지닌 집단들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유형의 베이비붐 세대는 서로의 차이들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다가올 고령화시대로 그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베이비붐 세대들과 그 이후 세대들이 겪은 사회경제적 변동들을 살펴보자. 특히 교육 입시의 변동 및 여성의 시장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보자.

교육개혁

베이비붐세대가 이전세대와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이게 된 계기는 아마 1968년 7월 15일 교육혁명이라고 불리는 중학교 무시험제일 것이다. 무시험제는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 후 1970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6대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중학교 무시험제도는 1956년생 이후의 출생자들에게 그 이전의 출생자에 비해 중학교 진학률을 높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로부터 4년 뒤인 1974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고등학교마저 본고사 대신 연합고사를 통하여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하였다. 국가연합고사제도는 1975년 대구, 광주, 인천에서,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충청에서.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입시개혁을 했다는 것은 동일한 년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일지라도 성장지역에 따라 다른 교육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표 1>와 <표 2>를 비교하여 보면, 우선적으로 중학교 무시험이 시행되어 입학한 둘째 해인 1970년 중학교 진학률(1957년생)은 약 66.1%였고, 남학생(74.3%)이 여학생(56.5%)보다 훨씬 진학률이 높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0년도(1967년생)에는 전체 진학률은 95.8%로 급등하였고 남녀 간의 교육기회 차별도 거의 해소되었다(남학생 97.4%, 여학생 94.1%). 이는 1950년대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1960년대 후반 베이비 붐 세대들이 보다 많은 교육 혜택을 받았고 또 남녀평등의식이 강할 수 있다는 역사적 배경을 보여준다. 1970년도(1954년생)와 1980년도(1964년생) 사이의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면, 전체 진학률은 70.1%에서 84.5%로 상승했고 또 진학자 수도 219,142명에서 629,520명으로 거의 3배로 증가하였다. 진학자의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139,204명에서 355,360명으로 증가하여 약 2.55배가 되었고 여학생은 79,938명에서 271,160명으로 증가하여 약 3.39배로 되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수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사이의 진학률 차이는 오히려 2%에서 6.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중학교 졸업자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70년도에는 37.2%에 불과한 반면 1980년도에는 45.2%이었다. 이것은 입학시험을 통해 중학교를 진학했던 1970년 졸업생의 경우 이미 중학교 진학에서 여학생들이 교육혜택에서 차별을 받아 덜 중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1980년대 남녀간 진학률 차이가 1970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이상의 진학률은 1970년 26.9%에서 1980년 23.7%로 내려갔지만, 진학자 수는 30,903명에서 110,8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는 145,062명에서 467,38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전문대학 입학자의 수의 증가 폭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 해석된다. 진학자의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24,325명에서 67,312명으로 증가하여 약 2.77배가 되었고 여학생은 14,748명에서 43,505명으로 증가하여 약 2.95배로 되었다.

한편 1970년대 고등학교 진학률에서 남녀 차이가 미비하고 또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의 진학률보다 더 높다는 사실은 여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학교 진학에서 차별을 받지만 중학교 진학 후에는 차별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70년 당시 상당수의 많은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킬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선택의 원칙이 필수였다. 딸보다 아들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

가 주어졌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 집안의 경우는 달랐다.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여성들은 교육 혜택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동일한 195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의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성들이 성장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표 1> 1970년도 각급학교 진학률

				단위: 명. %
진학단계	성별	진학자수	졸업자수	진학률(%)
초등학교 → 중학교	계	528,652	799,969	66.1%
	남	319,983	430,865	74.3%
	여	208,669	369,104	56.5%
중학교 → 고등학교	계	219,142	312,814	70.1%
	남	139,204	196,570	70.8%
	여	79,938	116,244	68.8%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계	39,073	145,062	26.9
	남	24,325	93,477	26.0
	여	14,748	51,585	28.6

자료: 교육부·교육개발원(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55, 73, 89쪽 재구성. 오욱환(2000) 280쪽 재인용

참조: 진학률=(졸업자 중 진학자/졸업자) * 100

<표 2> 1980년도 각급학교 진학률

				단위: 명. %
진학단계	성별	진학자수	졸업자수	진학률(%)
초등학교 → 중학교	계	837,204	874,329	95.8%
	남	436,444	448,244	97.4%
	여	400,760	426,085	94.1%
중학교 → 고등학교	계	626,520	741,618	84.5%
	남	355,360	406,040	87.5%
	여	271,160	335,578	80.8%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계	110,817	467,388	23.7%
	남	67,312	274,311	24.5%
	여	43,505	193,077	22.5%

자료: 교육부·교육개발원(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55, 73, 89쪽 재구성. 오욱환(2000) 280쪽 재인용

참조: 진학률=(졸업자 중 진학자/졸업자) * 100

고등교육 진학자와 진학률은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급증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연합고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고등학교 졸업생수를 급증했고 그와 더불어 졸업정원제를 통한 1980년대 초반 대학 입학정원 확산을 통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불과 5년 사이에 고등교육 진학자의 수는 1985년에 233,737명이 되어 약 2.11배로 증가하였고(남자는 2.01

배, 여자는 2.29배), 또 진학률도 36.4%로 급증하였다(남자는 38.3%, 여자는 34.1%). 그 후에도 고등교육 진학률을 계속 증가되었고, 또 고등교육 남녀 사이의 진학자 수와 진학률에 대한 차이도 점차 사라졌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 26.7%에서 1980년 27.2%, 1990년 33.2%, 2000년 68.0%, 2005년 82.1%로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이 1970년 24.2%, 1980년 23.9%, 1990년 33.3%, 2000년 70.3%, 2005년 83.3%로 증가했고, 여성은 1970년 25.3%, 1980년 22.2%, 1990년 31.9%, 2000년 65.4%, 2005년 80.8%가 진학하였다⁶⁾. 비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진학률을 보이지만, 그 차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⁷⁾.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교육 개혁은 각 세대들에게 평균적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차별적 교육기회의 차이는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애시기에 다른 정도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형성하게 하였고 또 그 자본은 상이한 삶의 방식을 형성하게 하는 여건이 되었다. 여기서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성과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66년 37% 수준이었던 것이 1980년 42.8%, 1990년 47%, 1995년 48.4%, 2000년 48.3%, 2005년 50.1%로 향상되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급상승하였다.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인 53.5%이었지만,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직전 1997년에 66.4%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여 61-62%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가장 괄목할 상승을 보여준 집단은 25-29세 여성들이다. 1980년대에는 30%대에 머물렀던 것이 1990년 42.6%, 1995년 47.9% 외환위기를 맞은 해인 1997년에 53.8%로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약 66.1% 수준에 도달하였다. 20대 전반 여성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인다. 한편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1990년 약 10% 수준이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의 상승폭은 완만하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여성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낼 것이다.

6) <표1>과 <표2>에 근거해서 한 개인이 1970년과 1980년에 대학에 진학할 확률을 계산한다면, 그 개인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확률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할 확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 위의 표를 가상의 진학률로 가정한다면, 1970년도 개인이 전문대학 이상 진학할 확률은 12.5%이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6%, 여자는 11.1%이다. 그리고 1980년에는 개인은 19.2%이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86% 여자는 17.1%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진학률은 약 95%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 가운데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므로 오늘날 젊은 세대의 약 76%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볼 수 있다.

7) 2005년 25세 이상 여성 중 대졸이상은 25.4%인 반면 남성은 37.8%이다. 이것은 과거 출생코호트에서의 남성과 여성들 간의 대학진학률을 반영한 결과로 생긴 큰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 20대와 30대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5
전체여성	45.7	44.4	49.0	50.9	52.7	50.1	50.6	52.0	50.1
20-24세	53.5	55.1	64.6	66.1	66.4	61.1	60.8	60.9	62.6
25-29세	32.0	35.9	42.6	47.9	53.8	51.5	52.1	55.7	66.1
30-34세	40.8	43.6	49.5	47.6	51.1	47.5	48.4	48.6	50.2

자료출처: 김태헌·이삼식·김동희(2005) 81쪽

또한 증가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맞벌이 부부를 증가시킨다,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가 아닌 부부와 다른 생활양식을 띠기 쉽다. 이를테면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가 아닌 부부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으며⁸⁾, 보다 소비지출에서 외식, 교육비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

이러한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성은 다가 올 고령화를 위한 정책 설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에는 12.6이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이 진입하기 시작할 시기인 2020년에는 21.8, 그리고 2030년에는 37.3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점점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에 의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령화시대에는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상호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상호의존성은 서로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고령화 시대에 처음으로 진입하게 될 베이비 붐 세대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거의 부재하다. 오히려 오늘날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세대 간의 갈등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절실한 상호의존성을 파괴시킬 위험성을 지닌다⁹⁾. 우리 사회인구학자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 연구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8) 2005년도 전국 맞벌이 소득은 3,779.7만원으로 맞벌이가 아닌 부부 소득 2,729.4만원보다 무려 1,050.3만원이 많았다.

9) 만일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고령화 시대에서의 베이비붐 세대는 매우 끔찍할 수 있다. 세계화와 시장경제 원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 비용이 싼 제3세계에 지사들을 이주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들을 줄어든게 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이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기업은 제 3세계에서 싼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할 때, 젊은이들의 노동을 통해 제공받는 연금의 위기 그리고 부동산 하락 등과 같은 시장의 위험으로 인한 개인 노후보험의 위기는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1980년대 후반 이래의 높은 출생성비는 젊은 세대, 특히 남성들에게 배우자를 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제3세계의 여성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들과 혼인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3. 세계화와 인구학 자료들

2006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세계 10대 무역대국들만이 도달하였던 고지인 3000억불에 도달하였다. 무역상대국도 1960년대는 59개국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무려 전 227개국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해외 여행자 수도 1960년 8천여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950여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세계인구 현황(2006 World population Data Sheet)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수는 약 65.55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약 18.5%(12.16억)가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이고, 나머지 81.5%(53.39억)는 아프리카, 중국과 동아시아, 동남아, 중남미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이다. 개발도상국의 출생률이 선진국의 출생률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래에 개발도상국 인구가 전 세계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므로, 2025년에는 세계인구가 약 79.40억 명이고 그 중 선진국이 12.55(15.8%)억 개발도상국이 66.85억(84.2%)으로, 2050년에는 92.43억 명이고 그 중 선진국 12.61억(13.6%) 개발도상국 79.82억(86.4%)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인구 비율은 어떤 다른 지역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인구성장의 비율은 우리가 미래의 지구촌사회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들 못지않게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비록 세계화이후 비서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요구된 결과 최근 몇 개 주요 대학에서는 지역학 대학원 및 연구소까지 개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아프리카, 중남미와 라틴 지역과 같은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더구나 이러한 연구조차 개발도상국가의 정치 경제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출 뿐 지구촌사회에서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의 측면들을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학은 개발도상국의 문화들을 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풍부히 갖고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가들을 역사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이를테면 세계출산력조사(World Fertility Survey)와 인구보건조사(Demographic Health survey)등이 있다.

세계출산력조사는 <표 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1974년부터 1986년 사이 42개의 개발도상국과 20개국의 선진국에서 행해진 세계의 인구조사이다. 각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약 5,000명의 여성들이 면접을 통해 조사되었고, 그 총 수는 약 35만 명에 달했으며, 그들 표본은 세계 인구의 약 40%를 대표하고 있다. 세계출산력조사의 주된 목적은 출산력을 측정하고

출산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질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결혼, 피임지식과 사용, 수유, 출산 선호도, 출산 역사, 자식의 성과 같은 가족형성과정에 관한 내용들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세계출산력조사의 질문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조사되는 일반적인 질문 항목들과 나라의 문화에 따라 특별히 조사되는 특정 질문항목들로 구분되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질문 항목들이, 자메이카에는 그 나라의 독특한 결혼 양식에 관한 질문 항목들이, 한국은 남아 선호에 대한 질문 항목들이 일반적인 질문항목과 더불어 특별히 첨가되었다.

인구보건조사는 세계출산력조사의 후속타로 실시되었다. 인구보건조사는 1986년 실시한 이래 2006년 11월 현재 178개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를 조사한 세계출산력조사와 달리, 인구보건조사는 개발도상국들을 조사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구보건조사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연계시켜 조사한다.

이를테면 비즈니스 관계로, 외국인과 만날 때 가장 사적으로 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마 서로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를테면, 결혼을 언제 했는지, 아이는 몇 명인지,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가졌는지, 아니면 동등한지,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또는 부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어느 부인이 가장 사랑스러운지 등을 물어봄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사실 상대방의 삶을 잘 알지 못해 오해를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상대방(즉, 외국인)의 삶을 알면 그것으로 인해 상당한 친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비즈니스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 정책에서 남을 아는 것, 특히 다른 나라의 가족 삶에 대한 지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한 나라 국민이 어떤 가족 삶의 전략을 선정하는지는 단지 가족 차원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그 나라의 주된 가족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종교(그리고 정당)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토드, 1997), 또한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은 그 나라 국민이 어떤 가족 삶의 선택을 하는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urdieu, 1977, 1980; Medick and Sabeau, 1984). 그래서 토드(Todd, 1985)같은 학자는 가족 사회학을 한 특수한 형태의 정치사회학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볼 때, 한 나라의 가족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출산력조사와 인구보건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개발도상국가의 가족 문화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풍부하게 획득할 수 있다.

<부록 1> 세계출산력조사에 참여한 나라들.

나라	1981년 중반 인구수 (백만)	조사년도	표본의 수(여성)
A. 개발도상국가들			
아프리카			
베넌	3.8	1981/2	4,000
카메룬	8.7	1978	8,200
가나	12.0	1979/80	6,100
코르티부아르	8.5	1980/1	5,800
케냐	16.5	1977/8	8,100
레소쑤	1.4	1977	3,600
나이지리아	79.7	1981/2	9,700
세네갈	5.8	1978	4,000
모리타니	1.7	1981	3,500
모로코	21.8	1980	5,800
수단(북부)	19.6	1978	3,100
탄자니아	6.6	1978	4,100
중동 아시아			
이란	39.8	1977	4,900
이집트	43.5	1978	8,800
요르단	3.3	1976	3,600
시리아	9.3	1978	4,500
터키	46.2	1978	4,400
예멘	5.4	1979	2,600
태평양 아시아			
방글라데시	92.8	1975/6	6,500
네팔	14.4	1976	5,900
파키스탄	88.9	1975	5,000
스리랑카	15.3	1975	6,800
피지	0.6	1974	4,900
인도네시아	148.8	1976	9,200
대한민국	38.9	1974	5,400
말레이시아	14.3	1974	6,300
필리핀	48.9	1978	9,300
타일랜드	48.6	1975	3,800
남미와 중남미			
콜롬비아	27.8	1976	5,400

나라	1981년 중반 인구수 (백만)	조사년도	표본의 수 (여성)
에콰도르	8.2	1979/80	6,800
파라과이	3.3	1979	4,600
페루	18.1	1977/8	5,600
베네수엘라	15.5	1977	4,400
코스타리카	2.3	1976	3,900
도미니카	5.6	1975	3,100
멕시코	68.2	1976/7	7,300
파나마	1.9	1975/6	3,700
가이아나	0.9	1975	4,600
아이티	6.0	1977	3,400
자메이카	2.2	1975/6	3,100
트린다드와 토바코	1.2	1977	4,400
B. 선진국가			
벨기에	9.8	1975/6	4,900
불가리아	8.9	1976	6,900
체코슬로바키아	15.4	1977	3,000
덴마크	5.1	1975	5,200
핀란드	4.8	1977	5,400
프랑스	53.9	1977/8	3,000
헝가리	10.7	1977	4,000
이스라엘	3.9	1973/4	6,000
이탈리아	57.2	1979	5,500
일본	117.8	1974	2,900
네덜란드	14.2	1975	4,500
노르웨이	4.1	1977/8	4,100
폴란드	36.0	1977	9,800
포르투갈	10.0	1979/80	5,100
루마니아	22.4	1978	10,100
스페인	37.8	1977	6,300
스웨덴	8.3	1981	5,000
스위스	6.3	1980	1,800
영국	55.9	1976	6,600
미국	229.8	1976	8,600
유고	22.5	1976	7,500

출처: Lightbourne, R. et al. 1982. The World Fertility Survey: Charting Global Childbearing. Population Bulletin Vol 37, No. 1. p.4

Scott, C., and V. C. Chidambaram, 1985. World Fertility Survey: Origins and Achievement. p. 12-13 in Reproductiv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Insights from the World Fertility Survey. edited by Cleland, J. and J. Hobcraf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2> 178개의 인구보건조사

아프리카

이집트(Egypt 1988, 1992, 1995, 1997, 1998, 2000, 2003, 2005)

탄자니아(Tanzania 1999)

베냉(Benin, 1996 2001, 2006)

보츠와나(Botswana, 1998)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1992/93, 1998/99, 2003)

부룬디(Burundi, 1987)

카메룬(Cameroon, 1991, 1998, 2004)

차드(Chad 1996/97, 2004)

코모로 이슬람 연방 공화국(Comoros, 1996)

콩고(Congo, 2005, 2006)

코트디부아르 공화국(cote d'voire 1994, 1998/99)

에리트레아(Eritrea, 1995, 2002)

에티오피아(Ethiopia 2000, 2005)

가봉(Gabon, 2000)

가나(Ghana, 1988, 1993, 1998, 2003)

기니(Guinea, 1992, 1999, 2005)

케냐(Kenya, 1989, 1993, 1998, 2003)

레소토(Lesotho, 2004)

라이베리아(Liberia 1986)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1992, 1997, 2003/2004)

말라위(Malawi 1992, 2000, 2004)

말리(Mali, 1987, 1995/96, 2001, 2006)

모리타니(Mauritania, 2000/01)

모잠비크(Mozambique 1997, 2003)

나미비아(Namibia 1992, 2000)

니제르(Niger 1992, 1998, 2006)

나이지리아(Nigeria 1990, 1993, 2003)

르완다(Rwanda 1992, 2000, 2005)

세네갈(Senegal 1986, 1992/93, 1997, 1999,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1998, 2004)

수단(Sudan 1990)
스와질란드(Swaziland 2006)
탄자니아(Tanzania 1992, 1996, 2004)
토고(Togo, 1988, 1998)
튀니지(Tunisia, 1988)
우간다(Uganda, 1988, 1995, 2000/01, 2006)
잠비아(Zambia, 1992, 1996, 2001/02)
짐바브웨(Zimbabwe, 1988, 1994, 1999, 2005/06)
CAR(Center African Republic, 1994/95)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Guatemala 1987, 1995, 1998/1999)
볼리비아(Bolivia, 1989, 1994, 1998, 2003)
브라질(Brazil, 1986, 1991, 1996)
콜롬비아(Columbia, 1986, 1990, 1995, 2000, 2005)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1986, 1991, 1996, 1999, 2002)
에콰도르(Ecuador 1987)
엘살바도르(El Salvador, 1985)
아이티(Haiti, 2000, 2005)
온두라스(Honduras, 2005)
멕시코(Mexico, 1987)
파라과이(Paraguay 1990)
페루(1986, 1992, 1996, 2000)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 Tobago)

아시아

아르메니아(Armenia, 2000, 2005)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2006)
카자흐스탄 공화국(Kazakhstan, 1995, 1999)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1996)
키르기스스탄(Kyrgyz Republic)

몰도바(Moldova Republic, 2005)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2000)
모로코(Moroco, 1987, 1992, 2003/04)
요르단(Jordan 1990, 1997, 2002)
예멘(Yemen 1991/92, 1997)
터키(Turkey, 1993, 1998)
캄보디아(Cambodia, 2000, 2005)
베트남(Vietnam, 1997, 2002)
인도(India 1992/93, 1998/99, 2005/2006)
인도네시아(Indonesia, 1987, 1991, 1994, 1997)
방글라데시(Bangladesh 1993/94, 1996/97, 1999/2000, 2004)
파키스탄(Pakistan 1990/91)
네팔(Nepal 1996, 2001, 2006)
필리핀(Philippines 1993, 199, 2003)
스리랑카(Sri Lanka 1987)
타이(Thailand, 1987)